

盧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분야별 쟁점

“목숨 걸고 부동산 투기해도 재미 못볼 것”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일단 탈당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여당의 정계개편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탈당 카드 우리당으로 중도통합 충분히 가능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개헌’을 조건으로 야당이 요구한다면 탈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던 노 대통령은 이번에는 여당이 신당 추진에 걸림돌로 생각한다면 탈당을 이탈할 수 있다는 조건부 탈당 의사를 밝혔다.

가 나오고 있다. 반면 ‘질서있는 통합신당’을 모토로 내걸고 있는 당 사수파와 중도그룹은 자신들의 입지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은 것으로 포착된다.

임기 단축 개헌과 재신임 연계 절대 없다

개헌안 관철을 위한 승부수로 정치권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는 임기 단축 시나리오에 대해 “절대로 없다”고 해고를 밝혔다.

설명이었다. 노 대통령은 거듭 임기단축설을 일축하고 나선 것은 개헌제안이 국가 미래를 위한 결단이란 점을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정상회담 문 열어놓고 있지만 시기 아니다

노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은 ‘항상 문은 열어놓고 있지만 지금으로선 어렵기 때문에 개최 시도가 없으며 현재로서는 북핵 6자회담이 우선시 돼야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고 현재 입장을 정리했다. 노 대통령은 “6자회담이 큰 틀”이라고 전제한 뒤 “북핵 문제가 기본적으로 가다익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회담은 북쪽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남쪽은 얻을 것이 없다”며 “이 일은 순차로 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부동산 집값 오르면 더 강한 정책 내놓을 것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 올라가면 더 강력한 것(정책)을 준비해서 낼 것”이며 “목숨을 걸고 부동산 투기를 해도 별 재미를 못볼 것”이라고 강력한 투기억제 의지를 재천명했다.

문이 책임지고 집값을 안정시켜야 하며 시장바람에 밀려있는 서민들의 주거를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공공부문에서의 공급을 더 늘리는 한편 내집 마련이 어려운 계층도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정동영 “대통령이 만든 정당 아니다”

최근 대권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이 25일 자신의 고향인 전북지역을 1박2일 일정으로 방문, ‘땀발 다지기’에 나섰다. 그의 전북 방문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세번째, ‘친정 공약’을 통해 고건 전 총리의 대선불출마 선언 이후 나타난 지지율 상승세를 이어가 마의 10%선을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읽혀진다.

에서 탈당할 수도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당의 진로와 관련한 고민과 모색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어느 누구의 영향력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당 창당이 노 대통령의 부정치 견해를 무릅쓰고 이뤄졌다는 비사를 소개하고 대통령이 당의 진로 문제에 개입해선 안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野 “명백한 사전선거운동” 與 “중립의무 위반 아니다”

■盧대통령 선거개입 논란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선거 개입’ 논란에 휩싸였다.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대목은 “열린우리당을 좀 도와달라”는 여당 지지호소 발언과 “경제로는 차별화가 안 된다”는 ‘경제대통령 만능주의’ 불가론, 중립내각 거부 등 크게 3가지다.

이 발언을 놓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경제 살리기’를 모토로 내세우고 있는 한나라당 대선 주자, 특히 50% 안팎의 지지율로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현대건설 최고경영자 출신의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야당은 이 3가지 사안을 묶어 “노 대통령이 중립 의무를 어기고 대선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고 비난하고 나선 반면, 열린우리당은 “야당이 대통령의 발언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며 맞섰다.

대선 정국에서 정치권 인사가 배제된 그야말로 ‘중립내각’이 필요한데도 대통령이 이를 정면으로 거부했다는 것이다.

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며 중앙선관위에 공개 질의도 검토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노 대통령이 정권연장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본격적인 사전선거운동에 나섰다”면서 “노 대통령의 발언은 명백한 정치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지원호소” 논란=노 대통령은 이날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탈당과 자신의 당적 정리 문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우리당이 흔들리는데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와 우리당을 결부하지 마시고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중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국민에게 특정 정당을 지지하도록 유도한 발언이 된 것은 매우 심각한 정치적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용서의 주체가 여당 당원이라면 크게 문제될 게 없지만 국민을 상대로 한 신년회견인 만큼 언뜻 들리면 국민에게 직접 여당 지지를 공개 호소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게 야당의 반응이다.

이에 맞서 열린우리당 이상호 대변인은 “국민이 ‘노무현 디스카운트’ 때문에 여당에 비판적이라면 자신과 분리해서 있는 그대로 봐달라라는 얘기를 한 것”이라면서 “이번 대선에서 열린우리당 대선 후보를 찍어 달라는 게 아니지 않느냐. 중립의무 위반, 정치개입으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경제 정책이 무슨 차별성이 있느냐”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에게 특정 정당을 지지하도록 유도한 발언이 된 것은 매우 심각한 정치적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내 모든 문제 전당대회서 결정하자”

김재균 우리당 광주시당위원장

열린우리당 김재균 광주시당위원장은 25일 당의 향후 진로와 관련 국회의원과 중앙위원들에게 “질서 있는 논의와 그 결과에 승복하는 절치적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그는 당원들에게도 “모든 당내 문제는 당원들의 총의가 모이는 전당대회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 순리”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또 “우리가 진정성을 갖고 국민들과 함께 하고자 할 때 비로소 국민들이 우리를 신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dvertisement for 'Green Farm Restaurant' (그린장폐식장)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modern building and text describing the restaurant's location and services.

Advertisement for 'Green Farm Restaurant' (그린장폐식장)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modern building and text describing the restaurant's location and services,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and a phone number.